

한미 FTA 개정...與 “국익위해 협력을” 野 “여당 먼저 사과를”

공청회·국회 보고 앞두고 날선 공방

민주당·청와대 “부처와 이해 관계자 의견 들어 반영에 최선”

한국당·바른정당 “과거 비준 당시 민주당 반대 책임 따져야”

국민의당 “정부 해명 필요”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국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의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국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국이 합의한 날에 개정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8일 한미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히 임해야 한다”면서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원칙으로 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면서 야권 일각의 ‘말 바꾸기’ 공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당 역시 갑작스러운 개정협상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 협상을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국민의당 한미FTA대책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시작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개정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에 부

담이 되는 개정은 지양하되 국익을 따져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북핵·FTA·협치 ...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인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에 정식 복귀할 예정이지만 겹겹이 쌓여진 다양한 현안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느냐가 일차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10일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등 대북 지렛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당면 과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표면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압력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뜨거운 현안이다.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필리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외교적 관건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재가동 문제가 새롭게 다뤄나가야 할 이슈로 다가왔다.

내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조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

축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 4당간에 큰 틀의 컨센서스가 구축돼있는 만큼 ‘협치의 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에서는 세계개편과 부동산대책,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처럼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이밖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 지도 국정 주요 현안의 하나로 꼽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인 9일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우리 말을 들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빨라진 ‘지방선거 시계’

민주·국민의당 호남 조직 서둘러 정비

10여 일에 달했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역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바빠졌다. 오는 12일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조직을 서둘러 손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민주당과 호남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당 간 호남 격돌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선거 시계’도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핵심 조직책 인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지역위원회를 선거체제로 개편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의당과 바른정당·자유한국당도 광주·전남 뿌리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시·도당은 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일선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작업을 사실상 도맡아서 해야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시·도당 역량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내년 선거를 책임질 핵심 보직인 정책미디어실장과 조직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미디어실장에는 지난 대선에서 시장 선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중씨가 선임됐고, 류일천 정책미디어실장도 조직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방선거에 대비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도당 사무처 신임 정책실장에 김호진 전 기획국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민주당

은 지방선거 준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운영한다.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 산하에 지방선거 공약TF, 소통위원회, 지방정치아카데미 등 3개 기구를 뒀다. 민주당은 시장과 도당이 지방선거 준비에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을 선임하고 시장과 지역위원회를 선거 체제로 조기 구축했다. 광주시당과 8개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는 한편 경쟁력 있는 후보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당면현안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5·18 특별법 국회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 ▲지역산업 보호와 발전을 3대 과제로 정하고 현안 해결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신뢰와 정성’으로 지역민에 다가가면 지난해 총선 때처럼 지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정인화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의 토대를 세워보겠다는 각오다. 바른정당은 지역위원회 조직 구성과 위원장 선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남 다가서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추석 연휴에 지역을 돌며 광주·전남에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발전을 위해 현실향 인물론을 앞세워 지방선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나주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농협

한국관광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F 한국농어촌공사

EX 한국도로공사